

의안  
번호

1265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6. 9. 2.(금)
-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6. 9. 13.(화)
- 라. 위원회심사 : 2016. 9. 22.(목)

### 2.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토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신설 및 기능 개정(안 제5조)
- 나. 위원회 설치 신설 및 기능 개정(안 제5조)
- 다.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촉 해제(안 제6조의3 ~ 제6조의5)
- 라. 운영세칙,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제20조)
- 마.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1, 별지 서식2)

### 4.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 5. 검토의견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이 정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4.14., 2013.3.23.>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

시·장소·안전·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9.2.6.]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전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4.14.]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